

ISSN 2384-3624

# JNKS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8, No. 2  
2022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홍석훈 (창원대학교)

## 편집위원

Balazs Szalontai (고려대학교)	임예준 (고려대학교)
이기완 (창원대학교)	나용우 (통일연구원)
여현철 (국민대학교)	박성용 (전북대학교)
최용섭 (선문대학교)	황수환 (통일연구원)

## 편집간사

김에스라 (고려대학교)      배상경 (고려대학교)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8, No. 2

**인쇄·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발행인** 임재천  
**편집인**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편집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323호  
전화 : (044)860-1927, E-mail : j.nks\_korea@daum.net  
홈페이지 : p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ISSN 2384-3624

# Contents

-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Using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

김수정, 김영민, 정유석 / 7

- ✔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 방향  
Cultural Policy in the Kim Jong Un era and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박영하 / 29

- ✔ 美 바이든 행정부의 ‘對中정책’과 ‘北中관계’ 동학:  
美中 ‘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Dynamic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김남성 / 53



## JNK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8, No. 2 (2022)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

김수정

제1저자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jerrykim@kiet.re.kr

김영민

참여저자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kym2060@kiet.re.kr

정유석

교신저자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yoosukjung@ibk.co.kr

## 초록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심화 등의 국제정세가 악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구상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이를 통한 남북공동경제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대북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제공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외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남북 산업협력 추진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규범 강화, 해외 수출 전략으로서의 공급망 진입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제품 생산 공정의 탄소 감축 및 친환경 생산품을 위한 구상도 포함하였다. 결국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남북 산업협력이 기후위기와

\* 본 고는 통일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남북 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 구축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수행)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둡니다.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조응한 고도화된 산업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북한은 이에 기초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의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남북 경제협력 추진의 필요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산업협력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확보될 수 있다. 한국에게는 녹색·친환경 제품의 생산기지 건설을 통해 향후 확산될 글로벌 친환경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에게는 양질의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산업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 산업협력이 '친환경', '친기후'이라는 브랜드로 국제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남북산업협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산업

원고투고일 2022년 11월 15일 | 원고심사일 2022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1일

## I. 서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심화 등의 국제정세가 악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경제·금융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에 맞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산업의 트렌드와 변화한 국제 지형은 과거 남북 협력이 추진되던 시기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을 중심으로 향후 남북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남북경제협력 모델을 구상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이를 통한 남북공동경제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제공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자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각국의 경제·산업정책, 국가간 교역에까지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EU에서 2021년에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하며 2050년에 유럽차원에서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이후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7개국에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별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간 산업·무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적인 기후관련 규범을 준수하고 탄소감축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역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녹색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있다. EU 시장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EU 시장에 수출할때 탄소비용을 부과받아 더 높은 가격으로 EU 시장에 수출해야 한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EU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EU의 녹색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EU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규제가 향후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로서는 녹색제품의 생산 및 녹색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 통상 전략이 수정이 필요하며 이는 남북 산업협력에도 주어진 과제이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남북 산업협력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소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빈번히 발생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특정 산업·품목, 특정 국가에 대해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공급망 충격과 변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입는다는 문제가 노정된 것이다. 남북 산업협력이 한국·북한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에 일부 기여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해외수출을 통한 경제적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면 남북 산업협력의 추진 필요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남북 산업협력 생산품의 해외수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화는 탄소감축 활동이 포함된 생산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집적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내에서는 남북 산업협력이 기후위기와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조응한 고도화된 산업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남북 산업협력은 기후위기 대응 및 남북한 공급망 연계, 글로벌 수출 잠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서의 제안과 차별화된다.

물론,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남북 협력 연구 분야에서도 친환경 협력, 재생에너지 협력, 기후협력 추진 필요성을 제안하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김경술 외, 2020; 양문수·이춘근·이석기, 2021; 손기웅, 2016). 이현주 외(2020)는 개성-해주 일대에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하여 정부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산업협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최근 국제사회의 산업 이슈 변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을 제안한 의미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산업분야의 협력을 제안하기 보다는 어떠한 방식의 산업협력 이어야 제조업의 녹색화 및 산업생산과 탄소저감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존재한다.

기존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친환경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평가한다. 제3장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제4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환경의 관점에서 개성공업지구 평가

개성공업지구는 남북이 합의하여 개발 운영한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참여한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증대, 수익 증대와 함께 북한 노동자 및 기업, 당국의 소득 창출, 그리고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당시 이 사업은 남북간 경제협력에 의해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와 목적도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 실증단지)의 성격도 있었다.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시 봉동리 지역에 남북측이 합의한 개발총계획에 따라 2천 만평 규모로 건설되었다. 개발총계획은 개성공업지구법 제13조에 따라 남측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이 작성하고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승인하여 작성되었다. 만약 남측 주도로 전 과정이 진행되고 남측의 법제도를 적용하였다면 국내 산업단지 건설 절차에 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전 과정이 반영되었을 것이나, 개성공업지구 개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가 생략되어 진행되었다. 다만 환경보전계획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반영되었다.

환경보전계획(현대아산 2005)에서는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대기보전, 소

음진동관리, 수질보전, 폐기물관리, 문화재보전, 환경성 검토 등 8개 분야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역적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설정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였고(자연환경보전), 소음과 중금속 배출이 적은 업종을 배치하고, 청정한 공기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대책을 고려하였다(생활환경보전). 또한, WHO 권고 수준을 기본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정화수종(남측의 환경부 추천 환경정화수종 44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대기보전), 소음은 ISO 권고치 수준을 준수하고(소음진동), 수질과 폐기물 관리 또한 국내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였다(수질보전, 폐기물관리). 마지막으로 환경성 검토(다음의 그림을 참고)는 개발업자가 분양받은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남측과 북측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개성공업지구 환경분야는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담당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의 건설과 운영 및 환경보호 대책을 수립하였다.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로는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을 들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일 3만 톤 규모의 폐수처리장(한국의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일 5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장, 60,900m<sup>3</sup> 규모의 매립장이 건설·운영되었다. 정배수장은 장풍군에 위치한 월고저수지에서 취수하여 일 6만톤을 정수처리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개성시에 공급하였다(<표 1> 참조).

<표 1> 개성공업지구 수자원 시설 제원

구분	정배수장	상수원	도송수관로	급배수관로
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량 : 6만톤/일</li> <li>- 약품투입 및 여과설비,</li> <li>- 중앙제어 설비</li> <li>- 배수지 : 2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량 : 18,340천m<sup>3</sup></li> <li>- 담저체 : 3개</li> <li>- 취수탑, 여수로 등 부속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수 : 17.9km (D900 강관)</li> <li>- 송수 : 11.96km (D600, 주철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 : 41.9km</li> <li>- 관경 : D100~D800</li> <li>- 변실 : 32개소</li> </ul>

\*자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2003년 6월에 개성공단 착공식을 진행하고 2004년에는 시범단지 조성 및 분양, 가동이 시작되었지만 폐기물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2004년 10월에 북측 총국과 남측의 현대아산은 ‘폐기물처리문제 관련 합의서’ 체결하고, 북측이 모든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며, 요금은 금강산관광지구와 유사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1차 소각시설(12톤/일)과 매립장이 준공됨에 따라 2008.8월, 북측 중국과 남측의 관리위원회간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관리위원회는 소각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북측(중국)은 폐섬유, 음식·건설·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계획 합의서’는 북측 중국과 남측 3개 기관(관리위, LH, 현대아산)이 체결(’05.11월)하였다.

<표 2>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계획 합의서 주요 내용

- 환경기준 합의(대기질, 하천수질, 소음기준)
  -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은 ’05년 국내 적용기준 수준에서 합의
- 배출허용기준 합의
  - 대기오염 가스상물질(19개 항목), 입자상물질(17개 항목), 냄새(8개 항목),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등 명시
  - 버릴물(폐수) 배출허용기준, 매물침출수(매립침출수) 등 명시
    - 버릴물(폐수) 배출허용기준 일부 항목에 대한 변경을 북측과 협의(’07.02.02.)하였으나, 합의에 따른 변경기준에 대한 정식 문건은 중국으로부터 받지 못함.
    - 변경 협의된 기준 : BOD(800mg/L이하), T-N(200mg/L이하), T-P(20mg/L이하)
  - 소음 및 진동, 토양기준 등 합의
- 환경보호사업 이행 정형 작성
  - 공단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환경보호사업 이행 정형으로 개발업자는 연 1회, 운영기관인 관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작성 명시

\*자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개성공단 개발 총서에서 정리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에서 개성공단은 적절한 계획이 반영되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낮추는 성과가 있었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 인프라를 설치하고, 폐수 배출기업 관리 및 환경조사, 산림조성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모든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개성공단에서 친환경적 측면에서 다소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버넌스가 남측과 북측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환경정책에 관한 남북간 인식 차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의 환경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과거 개성공업지구 경험에서의 교훈은 향후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때 한국의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개성공단은 환경측면에서 양호한 산업단지 운영 성과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생

락된 상태로 공단이 개발되었고 비교적 오염물질 배출량, 전력 사용량, 공업용수 사용량이 많지 않은 단순 제조업 중심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산업단지’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의 산업협력은 전력 발전시설 설치, 기계·화학첨단IT 등 오염물질 다배출 산업이 입지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엄격해졌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혹은 신규 산업단지 건설은 환경적 영향을 높은 수준에서 검토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개성공단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통해 운영하여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한국정부와 한국기업간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되기 전 북한이 폐기물 처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무단 소각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남북한 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차이는 상당히 컸다. 남북한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및 국제사회의 표준적인 제도를 준용하고, 향후 강화될 환경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북측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북측에 공단이 설치된 만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총 계획은 북한 당국의 협조와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발계획 작성과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남북한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공동 합의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개성공단 내 기반시설의 설치에 「개성공업지구법」 제29조(시설지원)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동법 제6조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개성공업지구법」 제10조는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한다고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별 친환경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남북 친환경 산업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북협상 창구의 일원화, 과도한 경쟁 방지, 중복 및 협력의 효과성 검토 등을 통한 효율적 협력방안 모색 필요하다.

한편, 과거 1단계 개성공단 사업에서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공업용수 사용이 많지 않았고, 오염 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경공업, 단순 제조업체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산업단지에 비해 오염원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재개될 남북 산업협력 및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참여 산업, 기업이 다양해지고 생산물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그리고 단지

의 규모가 커질수록 오염 관리 시설의 첨단화 및 대규모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환경 규범이 강화된 만큼 기존의 2단계, 3단계 사업을 재개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조치들은 강화,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자본투입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의 개성공업 지구지원재단이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sup>1)</sup>로 인증받고, 친환경공단 마스터 플랜 수립, 대북 협의, 사업 추진 등을 총괄한다면 예산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과거 개성공단 사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 사업은 20여년 전에 계획되고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인프라가 설치되고 오염관리를 하는 등 친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에 대한 남북한간의 인식 차이로 한국지역의 산업단지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의 환경보호 조치가 반영되었다. 향후 남북 산업협력 추진시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진출, 주요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받아들여도록 함으로써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국제 환경, 기후 규범이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Ⅲ.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

#### 1. 남북 산업협력을 위한 기본 전제

남북 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을 논의하기에 앞서 본 연구가 상정한 남북 산업협력의 원칙과 지향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본 장에서 다룬 남북 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 사항이다.

첫째, 본 연구의 배경과 같이 남북 산업협력은 환경친화적인 방식의 산업협력, 산업생산과 탄소배출간의 비동조화를 추구하는 탄소절감형 생산공정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환경적 고려가 부수적인 고려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이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 현재 한국에서는 KOICA와 산업은행이 GCF 인증기구이다.

모든 전기는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산업단지내 모든 산업 및 생산시설은 에너지 효율적이며 탄소배출을 최소화 하는 시설로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순환경제를 실현한 단지로 재사용·재활용에 의해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하여 원부자재 도입비용을 낮추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한국, 북한,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 북한 모두 UN 회원국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관련 목표가 총망라되어 있는 만큼 남북 산업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개선을 촉진시킨다면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북한의 참여유인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산업협력이 한국의 K-SDGs, 북한의 NK-SDGs 이행수준 향상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남과 북 모두 산업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기업 성장, 근로자 소득 증대 포함), 사회적 발전(소득불평등 완화, 지역 불균형 완화 등), 환경적 성과 개선(환경 오염 방지, 생태환경 보호, 환경적 역량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지역경제,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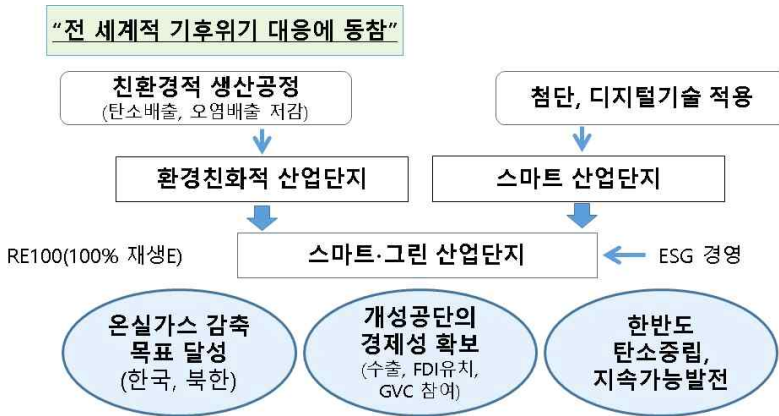
셋째, 산업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ESG 가치를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산업단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설비의 구축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차원에서 모든 경영 활동에서 기후와 환경, 사회적 기여, 법·제도·규칙을 준수하며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한국측 기업만이 아니라 북측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인만큼 남북 산업협력에 참여하는 북한 기업과 당국의 시장경제 이해도 제고 및 경험 축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여기에서 사용된 제도가 전체 경제특구로 확산되고 이어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 산업협력은 경제적 수익 창출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며 남북측 산업과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 양측의 정부 당국은 민간의 비즈니스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남북 산업협력이 국내용 생산이 아닌 수출용 생산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므로 수출산업 육성 관점에서도 산업단지 계획이 필요하다. 과거 남북 경험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취약하였지만 산업단지 운영이 양측 산업, 경제와 밀접히 연결되고 중요한 주제로서 성장한다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도 중단되지 않는 협력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산업과 밀접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협력 구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산업협력은 해외로의 수출, 해외기업 유치, 해외투자 유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한다. 글로벌화는 생산된 최종재화의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의 참여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 수출입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한, 남북 산업협력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 남북 산업협력 지역에 대한 해외기업의 유치까지도 포함한다. 글로벌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한다.<sup>2)</sup>

<그림 1> 남북 산업협력 단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자료: 김수정(2021)

위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과거 남북 경험에서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현재 글로벌 산업·통상·기후 질서의 변화를 고려하면 남북 산업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단위의 협력보다는 산업단지 형태로의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협력은 인프라 투자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특히, 친환경적인 산업협력의 가동을 위해서는 전력, 교통,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자원순환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단지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대규모 투자가 소요된다. 따라서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단지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과거의 남북 경험은 한국과 북한 사이의 배타적 양자거래로 가능하며 국제적 표준과 거리가 있는 경험 방식이었다(이석 2018).

둘째, 산업단지내에서의 공급망 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입주기업 간 작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자국의 공급망과 연계되도록 한다면 공급망 확장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단지내에서 긴밀한 공급체계를 형성한다면 산업단지의 안정적 가동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친화적 방식의 산업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산업협력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특구 등)를 환경친화적이면서 첨단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는 스마트그린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제조업의 녹색화, 제조업의 친환경화, 산업협력의 친환경화는 '첨단기술'의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혹은 스마트화 없이는 녹색화, 친환경화를 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산업협력 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이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 산업협력 단지에는 스마트그린기업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현재 스마트그린 수준은 낮지만 스마트그린 공장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약정한 기업에게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남북 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에서의 핵심 협력주체는 바로 스마트그린 기업이기 때문이다.

## 2.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전략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현재 한국에서 추진 및 운영중이다. 한국 정부는 2020년 9월에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산업단지 개발 준비를 본격화하였으며, 2022년 7월에 새만금 국가산단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중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11곳이며 조성이 진행중인 곳은 5곳이 있으며, 창원('19.2), 반월시화('19.2), 남동('19.9), 구미국가('19.9), 성서('20.5), 여수('20.5), 광주첨단('20.5)은 스마트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확대전환되었다. 따라서 남북 산업협력에서도 한국의 추진 사업을 참고하여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한국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원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여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운영하는 것도 추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3)</sup>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가 정의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교통부(2022)에 의하면 스마트

3)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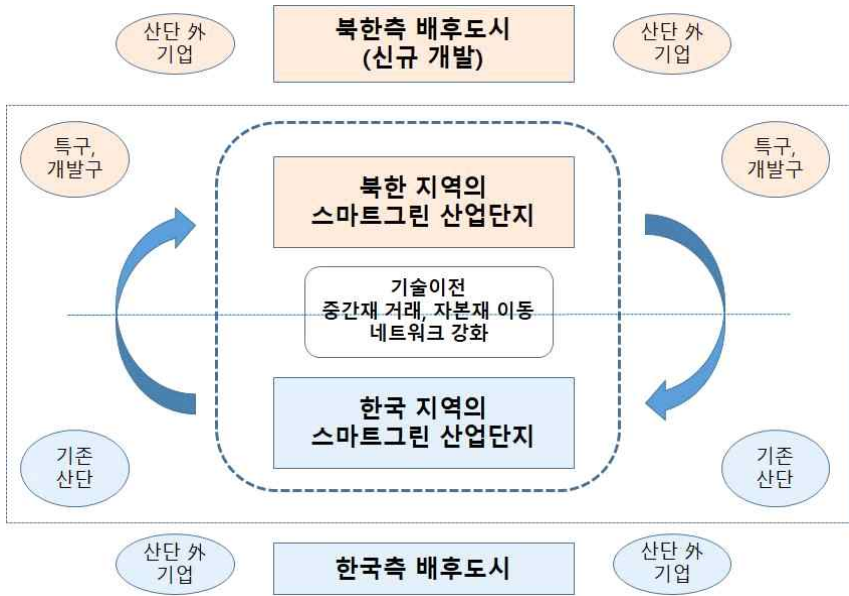
그린 산업단지에는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조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이며,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이다. 이러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본 연구가 추구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및 공급망 변화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조응한 남북 산업협력 추진에 필요한 이상적인 형태의 산업단지이다.

친환경을 위해서는 저탄소 및 에너지 효율화, 생산 투입요소 절감,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이뤄내야 하는데 이는 원부자재의 친환경화,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인프라(전력, 도로, 철도 등), 폐기물·오염 관리 시스템 구축, 재자원화(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운영의 디지털화(단지내 기업 간 유기적 연결과 통합 관리 시스템 등)가 필요하다. 이는 모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스마트(디지털)없이 그린(친환경)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스마트와 그린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구축 필요성을 높인다.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상 개념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남북이 함께 구축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남북이 공동으로 각자의 지역에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여 남측과 북측지역 산단 간 산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술협력이 용이하도록 트윈시티화(Twinning)하는 것이다. 이는 집적효과의 발생을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다. 집적효과는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 effect), 기술이전(Knowledge transfer), 산업단지 내 분업과 특화에 따른 평균비용 감소 효과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과거의 남북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인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산업협력을 한국 경제, 한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이상 여섯 가지의 방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남측과 북측에 각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공동·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근 배후단지, 산업단지와의 협력으로 확장 가능하여 기능적으로는 산업 클러스터화, 지역적으로는 회랑(corridor, 回廊)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림 2>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상



\*자료: 저자 작성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측과 북측 산업단지간 이동이 용이해야 하므로 남측, 북측 산업단지는 모두 접경지역에 인근에 설치되어야 한다. 북측에도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남측에도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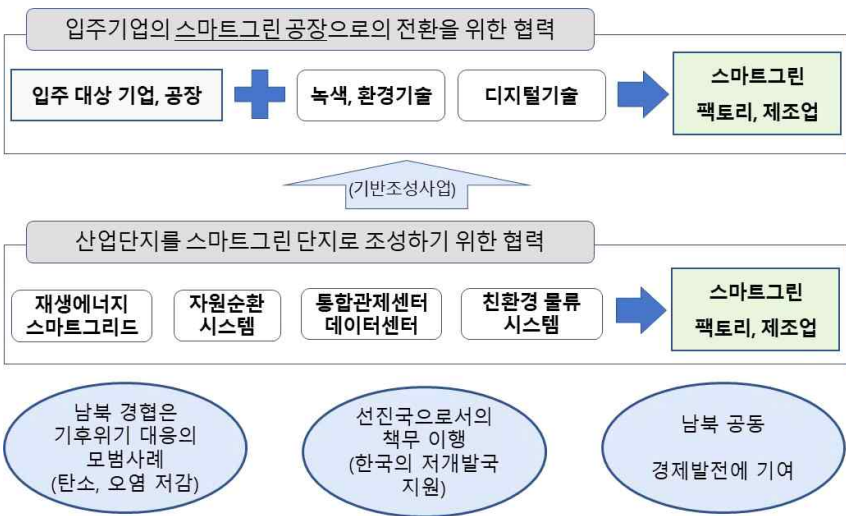
초기에는 산단 간 중간재(반제품, 부품·부분품)이 중심이다. 산단간 연계가 핵심 이므로 북측 생산품이 남측 산단을 거쳐 최종재로 생산이 되어야 산단간 연계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물론, 초기에도 북측에서도 최종재를 생산할 수 있지만 생산된 최종재는 남측 산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남북한 시장의 소비지로 이동하므로 이는 산단간 연계활동으로 불수 없다. 또한 점차 산단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술 및 인적교류를 통해 산업협력의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남측의 기술이 북측으로 이전(기계설비 제공과정에서의 학습효과 혹은 기술협력 등을 통해)되고 공동 장비공유 등을 통해 산단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측과 북측 지역의 연계가 강화되고 북측의 남북 공급망 내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역량이 강화되면 한국측 산단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산단과도 산업 연계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북측 산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측과 북측의 산단간 공급사

슬 구축을 추구하지만 100% 완전한 공급사슬 구축은 어렵다. 따라서 미비한 단계, 그 외 필요한 품목의 생산품은 산단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남북 스마트그린 산단 인근의 산업단지(경제개발구, 경제특구 포함), 기업과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로 진전된다면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여러 산업단지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클러스터형태, 회랑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 및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산업단지 차원의 스마트그린 인프라 확충(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원순환시스템, 통합관제센터·데이터센터, 친환경 물류 시스템), 둘째, 스마트그린 공장 입주, 셋째, 입주기업의 스마트그린 공장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략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 산업협력은 스마트그린 공장의 가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스마트그린화된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협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한국형 친환경 산업협력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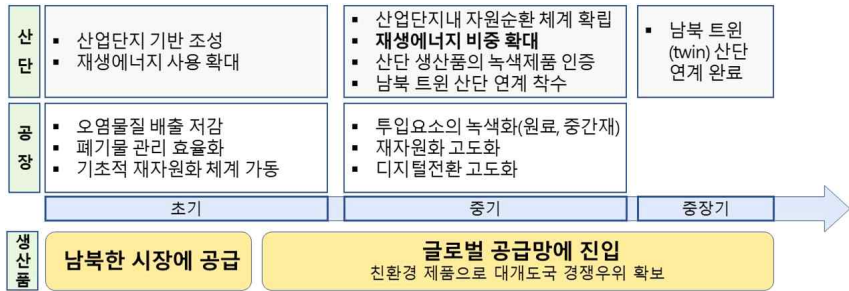
\*자료: 김수정 외(2022)

한국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건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발은 RE100을 달성하기까지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남북 산업협력은 한국에서의 산업단지 개발과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계획을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산업단지 개발은 입주기업 스스로의 생존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남북 산업협력은 중앙정부가 top-down 형식으로 추진하고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계별 적절한 목표와 이행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통한 산업협력 방안을 초기, 중기, 중장기로 나누는 것을 제안한다. 정치적 리스크의 완화나 제거 정도를 고려한 단계 구분은 아니며 남북 산업협력의 진전 단계(기업 역량, 단지 인프라 구축 정도, 협력 성과 등을 고려)를 고려한 것이다.

<그림 4>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단계별 전략



\*자료: 김수정 외(2022)

초기에는 초보적인 협력단계로 산업단지의 기반 조성(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 및 사용을 확대하는 시기이다. 개별 공장 차원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폐기물 관리에 주력하고 공장간 혹은 산업단지내에서 기초적인 재자원화 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주된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측과 북측 지역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가동하되, 북측 지역에는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만, 남측 지역에서는 대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의해서만 가동이 된다. 두 개의 산단은 상호 연계를 위해 협의를 시작하며 초보적인 협력 사업에 착수한다.

중기는 초기 단계의 스마트그린 수준을 보다 고도화하는 단계로 단지내에서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며, 남북한의 산단 간 연계를

본격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측 인력의 한국측 산단으로의 파견 등 인력교류가 시작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주력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녹색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이다. 투입요소 녹색화, 재자원화 고도화,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바탕으로 산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녹색화(녹색제품 인증 제도 운영)를 이룬다면 대 개도국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글로벌 녹색 공급망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장기 단계는 남·북한의 트윈 산단 연계를 완료하여 한반도내 경제특구로 기능하게 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의 RE100을 완성 및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남북 산업협력에 주어지는 새로운 외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할 남북 산업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과 유사한 방식으로 남북간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의 차이점은 클러스터 형식, 회랑 형식으로의 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에 있다. 남측과 북측에 각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산단간 연계 산업활동을 하며, 산업단지내·산업단지간 협력에서 미비한 기능은 외부의 산업단지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남북 협력을 제안한 기존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제조업의 녹색화를 위해 기업과 산단업지에 친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각 산업생산 공정을 친환경 설비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생산을 도모한다는 것에 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축 및 각 기업의 생산공정을 친환경화하고 생산 투입요소의 친환경화를 위해 대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용대비 수익성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친환경적 생산 방식으로 전환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녹색무역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기존 개도국과 차별화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에 기반한 생산활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포함한 양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경제적 효과성이 전망되고 입증되어야 이를

정책화하고 북한 당국을 설득하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은 과거 남북 산업협력 추진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규범 강화, 해외 수출 전략으로 공급망 진입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수치로 포함되기 어려운 잠재성이 존재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확보할 수 있고, 전력·교통·상하수도·오폐수처리·자원순환 시스템 등의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개별 입지차원보다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인프라가 완비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기업이 친환경 및 에너지고효율 설비로 생산활동을 수행한다면 즉, 남북 산업협력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확보될 수 있다. 한국에게는 녹색 친환경 제품의 생산기지 건설을 통해 향후 확산될 글로벌 친환경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에게는 양질의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산업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 산업협력이 ‘친환경’ ‘친기후’이라는 브랜드로 국제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협력방안은 남북 경험에 대한 관점의 수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들의 제안과도 상당부분 부합한다. 대표적으로 홍순직(2018)은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단순한 재개(recover)가 아니라 남북경협의 고도화, 북한의 자생력 회복,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재설정(reset)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홍제환(2018)은 남북 양자간 협력시 정치적 문제에 따른 경험 중단 위기를 줄이고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다자협력 형태로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갑식(2018)은 경제협력이 한국으로부터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며 북한 시장의 활성화 지원 및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식의 남북 산업협력의 친환경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은 많은 연구자들이 구상하고 제안하는 새로운 남북 경험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과거의 남북 산업협력은 남북간의 오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하여 가동되었다. 개성공단 운영은 참여한 기업들에게 남북

간 경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도모하는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시 재개할 남북 산업협력은 과거의 추진 사례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식의 산업협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갑식(2018). 남북경협 추진원칙. <북한경제리뷰>, 2018년 12월호.
- 김경술·신정수·김현규·이제석·나중희·손병관·이범석·박성진·정우진·최경수·이석기·명수정·김경민(2020).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수정(2021). 3. 북한의 체제전환, 경제성장을 촉진할 남북 산업협력 전략. <중앙아 체제전환 5개국의 경제성장 경험 연구 및 남북산업협력>, 통일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
- 김수정·이석기·김영민·정선인·윤인주·정유석·조성택·남영식·이은송(2022). <남북 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 구축방안 연구>, 통일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
- 손기웅(2016).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철원의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 심포지엄 발표문(2015.11.4)
- 양문수·이춘근·이석기(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순진(2022).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과 과제. <ENERGY FOCUS>, 제18권 제4호.
- 이석(2018).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 특징과 쟁점. <북한경제리뷰>, 2018년 8월호.
- 이현주·서연미·김민아·유현아(2020).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국토정책 Brief>, 2020.12.07.
- 현대아산(2005).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제1권)>, 서울: 현대아산.
- 홍순직(2018). 신남북경협 시대의 남북 경제·생활공동체 형성 방안. <북한경제리뷰>, 2018년 12월호.
- 홍제환(2018).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8-19(2018.05.08.).
- DPRK(2019). 제2차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limate Law.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ropean-green-deal/european-climate-law\\_en](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ropean-green-deal/european-climate-law_en). (검색일: 2022.10.30.).
- VNK(Vietnam Together Korea)(2022). 흥연성 클린 산업단지-투자가이드(2022.0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7/07).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383>.
-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검색일: 2022.10.30.).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통계. [https://www.kicox.or.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6&q\\_bbscttSn=20220315171025312&q\\_order=&q\\_clCod](https://www.kicox.or.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6&q_bbscttSn=20220315171025312&q_order=&q_clCod)

e=2. (검색일: 2022.11.15.).

##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Using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

**Soojung Kim**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Youngmin Kim**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Yoosuk Jung**

Industrial 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By the halted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worsened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cluding U.S-Sino conflict, the resum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 is hardly expected. Moreover, Covid-19 pandemic reshape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bove all, climate change and the reconstruction of global supply chain brought paradigm shift. Therefore, we have to contrive new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odel to response the changed global situatio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new direction for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it hopes to provide new economic momentum for Korean firms.

Regarding the changed external condition, this study suggest new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by utilizing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 To fulfill this goal this research explores the lesson from the previous industrial cooperation, recent response toward climate change and global norms, the necessity of participation into global supply chain. Besides, it handles global trends includ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and eco-friendly products. Namely,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 seeks high level of industrial cooperation by corresponding with climate change and global trade trends. If the aforementioned goals are achieved then we might obtain the new economic momentum.

The successful eco-friendly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will provide economic opportunities to the two Koreas. By the establishing eco-friendly products production base, South Korea can expand its role within the global supply chain. As for North Korea, they will have a chance to consume

high-quality products. It can also access the global supply chain. Eventually, these policies would increase the overall industrial capacity of North Korea. Last but not least, South Korea's brand image will arise as the frontier of eco-friendly industry and a good donor state.

---

Key words	Inter-Korean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Climate Crisis, Supply Chain
-----------	--

---

##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 방향

박영하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parkyoungha@gmail.com

## 초록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 문화정책의 특징은 크게 '백두혈통을 통한 정통성 확보', '정상국가를 추구하는 현대화·국제화', '사회주의 문명강국 달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문화는 기존의 '민족적 전통'과 '현대적 문화'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음악, 공연예술, 무용, 체육 등 각 문화 별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형성을 위한 교류 추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추진' 등 2가지 남북 문화교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남북한 사회 모두에서 '전쟁의 기억'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사회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미래세대가 새로운 '동질성 형성'을 이루어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민족이 공유하는 민족의 역사를 함께 되새겨 민족의 '동질성 회복'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주제어 | 북한 문화정책, 음악, 공연예술, 무용, 체육

원고투고일 2022년 10월 31일 | 원고심사일 2022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8일

## I. 서론

문화정책은 정책의 주체가 되는 국가 또는 정치집단이 문화를 창조·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계획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정치집단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북한도 과거부터 해방 이후

분열된 이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문화 정책을 사용해왔으며 현재도 북한은 문화정책을 사회주의 체제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양성을 위한 혁명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문화는 “력사발전의 행정에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총제 문화는 사회발전의 매 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도덕과 풍습 등의 발전수준을 반영한다. 문화는 사회생활의 어떤 령력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된다. 매개 나라의 문화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사회에서 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북한의 근본적인 문화개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조선말 대사전 2007, 1185).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하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북한의 문화개념과 문화정책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헌법’은 1948년 정권 수립과 동시에 최고인민회의의 최초 회의를 통해 채택된 북한 최초의 헌법으로 제2장에는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 10조, 11조, 20조에는 “국가 주도 하의 문화부흥 및 발전과 문화생활에 있어서 모든 공민의 동등한 권리와 예술 활동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넣어 국가 통치 수단으로서의 문화를 언급하고 있다. 1972년에는 제3장을 ‘문화’로 독립적인 체계로 개편하여 구성하였으며 문화의 핵심내용은 국가가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예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이성춘·고재권 2020, 3220-3221). 1992년 헌법 개정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데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시켰다(이성춘·고재권 2020, 3221).

이처럼, 「조선말 대사전」에 제시된 문화의 사전적 정의와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북한의 문화정책의 초점은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양성에 두고 있다. 또한 문화는 대중과 사회를 사상적으로 교육하고 혁신시키기 위한 수단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당성’, ‘인민성’, ‘계급성’, ‘전통성’을 계승하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북한 문화개념의 본질적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다(이성춘·고재권 2020, 3220).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 이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과 함께 새로운 북한 체제를 건설해나가야 하는 국면에 처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를 받은 북한은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한 시장 경제의 확산과 외부

문화의 유입으로 북한 문화의 변용이 불가피하였고, 이후 시장화, 개방화, 외부문화의 수용으로 북한 사회는 사상과 문화의 변용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사상과 통제, 수용과 배제의 유연한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문화는 ‘사회주의’·‘민족주의’·‘현대화’의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틀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동시에 현대와의 접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방향의 문화변용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특성과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특히 음악, 공연, 무용, 체육 등의 문화 분야 현황을 조사해 봄으로써 향후 남북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 기초

북한의 문화정책 시기를 크게 5기로 나누어보면, 1기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로 ‘새 조선’ 건설 및 통일된 독립 국가의 완성을 이루는 시기, 2기는 전후복구와 수령제 확립까지로 북한의 주체 확립을 이루는 시기, 3기는 김정일에 의해 북한의 ‘주체 문화예술’이 정리·정돈되는 시기로서 김정일식 문화예술이 확립을 이루는 시기, 4기는 선군정치의 등장으로 선군혁명 문학과 창작이 중심이 되었으며 전통과 민족주의 문화예술이 강조된 시기, 5기는 김정은 체제 시기로서 전통의 계승과 현대성의 수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정영철 2017, 295-296).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통틀어 북한의 문화정책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성격과 북한 고유의 ‘주체’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성격이 결합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건국 초기 소련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정책적 지향성을 보였고, 김정은 시대에는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문화 분야까지 적용시켜 ‘주체 문화 예술’을 체계화 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졌다. 김정은 시대에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성격의 문화정책을 이으면서도 현대성을 수용하여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정책 기초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문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1. 백두혈통을 통한 정통성 확보

김정은 체제는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김정은 체제의 조기 정착이었으며 급속한 권력승계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은 권력승계의 당위성과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홍보하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었다.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백두혈통 계승에 대한 정당성 확보로, 지도자 계승이 확정된 이후 김정은은 자신의 이미지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와 중첩시키면서 백두혈통을 계승하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시켰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는 추모 문학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3년부터는 ‘불의 약속’ 등 김정은 체제의 승계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품들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또한 1960년대 초연된 ‘리순신 장군(2016)’ 등과 같은 김일성 시대의 작품을 재창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김일성 시대의 감성과 유산을 이어받은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백두혈통을 강조한 정책은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안정을 위한 주요 문화정책 기조라 하겠다.

<그림 1>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과 연극 ‘리순신 장군’



\*출처: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585234#home>> (검색일: 202

2.10.29.); NKICT, <<http://nkict.com/archives/tag/%EB%B6%81%ED%95%9C-%EB%A6%AC%EC%88%9C%EC%8B%A0>> (검색일: 2022.10.29.)

## 2. 현대화국제화를 통한 정상국가화 추진

김정은 시대 북한은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위기와 외부문화의 유입을 통한 사상과 문화의 변용이 동시에 일어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변용에 대해 북한은 외부문화의 유입에 대해 일정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유연함을 증대하여 혁명·민족적 전통의 고수와 함께 자본주의적 문화를 수용하는 북한식 세계화와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정영철 2017, 298).

최근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는 ‘파격과 혁신’ 또는 ‘밝음과 젊음’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서 보이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행보들은 현실에 기반을 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반영한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란봉극단에서 선보인 미키 마우스의 등장과 외국 곡들의 연주는 파격적인 변화와 혁신처럼 보이지만, 장마당 확대를 통한 디지털 문화의 보급으로 외부정보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미 주민들에게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정영철 2017, 299). 이러한 북한 사회의 문화적 변용에 당면한 북한 당국은 오히려 이를 체제화 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현대성을 추구하는 북한식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의 “민족 고유의 것들을 다른 나라의 것과 합쳐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한다”는 발언은 민족주의-세계화의 문화정책 방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전영선 2012, 20),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중시하는 것은 공연을 통하여 모든 부분들에서 굳어진 사고방식과 낡은 틀을 마스고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따라 배워 자기 사업에서 혁신할 방도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며 언급한 모란봉악단의 평가는 김정은 시대를 맞이해 과거 선군시대를 거치며 경직된 사회·문화 현실의 개혁과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정영철 2017, 300).

이러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의 정책적 경향이 더욱 개방적이고 현대적 방향으로 변화되고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민족적 전통’과 ‘현대화’를 기반으로 한 정상국가를 추구하는 김정은의 문화정책 기조로 볼 수 있다.

### 3. 사회주의 문명강국 달성

북한은 제7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문명강국' 건설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문명강국 건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2012년 4월 1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이 노동당의 총비서로, 김정은이 제1비서로 추대되면서 정치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 등 3대 강국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박정란 2014, 37-38).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 정책은 이후에도 북한의 대내외 선전매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으며,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서」에서 “문학예술 부분은 아직은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 천만 심장에 불을 다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해나가는 것입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와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분야가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서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정영철 2017, 301).

이와 같은 문명강국의 정책방향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에서 '선진적인 문명강국'을 달성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의 변화, 교육의 변화, 체육의 변화, 문화적 생산체계의 변화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화 분야 중에서도 음악, 영화, 공연예술 등의 예술 분야는 김정은 체제의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어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와 충성도를 고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건설과 함께 주체 문화의 건설 원칙을 내세우면서 현대성의 요구와 결합시키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II. 김정은 시대 문화 분야별 현황

### 1. 음악

2011년 12월 갑작스러운 김정일의 사망으로 30대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장하였고 외부세계에서는 3대째 이어지는 세습체계에 대한 비판과 관심이 이어졌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며 보여준 그의 행보는 김정일의 행보와 비슷하게

비쳐졌으나, 2012년 7월 모란봉악단의 시범 공연 이후부터 외부세계는 김정은의 음악 정치를 이전과 구별 지으며 김정은의 ‘열린 음악 정치’로 평가하였다(배인교 2018, 41-42).

김정은 시대 악단의 음악 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내부단속과 사상 교양에 중점을 두는 음악 정치로, 북한 내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음악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북한을 대표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활동을 주요하게 살펴보면서 김정은 시대의 음악 정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에 의해 새롭게 창단된 전자음악단으로 2012년 7월 시범 공연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현재는 북한의 국보급 악단으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창단되면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공연예술과 문화예술의 정책 방향을 추론하고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에서는 “우리당의 음악정치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모란봉악단이야말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대진군을 힘있게 선도해 나가는 제일나팔수이다”라고 언급하며 모란봉악단의 위상을 강조하였으며, 모란봉악단의 공연에 참석하는 리설주의 모습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리설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기도 했다(박정란 2014, 37-38). 이처럼 모란봉악단은 조직, 공연구성, 노래선정, 내용, 공연순서 배치까지 대부분 김정은의 지시로 치밀하게 계획 및 의도된 메시지를 담고 전달하면서 김정은의 음악 정치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악단의 이름인 모란봉은 금수산에 있는 봉우리로 금수산 모란봉 기슭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이 있는 곳이다. 이는 모란봉악단을 통해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임을 과시함과 동시에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의미하고 있다.

모란봉악단의 시범 공연은 기존의 북한 공연예술과 차별화된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형식과 내용을 선보였다. 과거 악단의 공연에서는 출연자들이 주로 한복이나 전통복을 입고 등장하던 것과는 달리 모란봉악단의 공연에서는 짧은 미니 원피스와 어깨를 드러낸 상의, 10센티 이상의 하이힐을 신은 단원들이 등장하였으며, 미키마우스와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과 영화 <록키>의 주제곡 등이 사용되는 파격적인 공연이 선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음악을 내세워 서구 팝이나 R&B 창법의 음악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림 2> 모란봉악단의 공연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RINT/601033.html>> (검색일: 2022.10.24.); 조선의 오늘, <<https://dprktoday.com/news/39115>> (검색일: 2022.10.29.).

이처럼 형식적인 면에서는 현대화의 과정으로 다양한 음색과 리듬을 추구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적 내용을 강조하면서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적이고 교훈적인 정치선전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선전선동이 주를 이루는 북한의 음악 정치의 원리는 과거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겠다(천현식 2015, 557). 그러나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북한 주민들의 요구와 감정을 수용하고 동시대성을 획득하여 북한의 음악을 세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모란봉악단에 대한 북한의 대대적인 선전은 김정언의 음악 정치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공훈국가합창단은 북한의 선군정치 선포와 그 역사를 같이하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도 대표적인 북한의 악단으로 꼽히고 있다. 1995년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선포하며 군 협주단의 남성합창단을 독립시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으로 창단하였으며, 2004년에는 그 명칭을 ‘공훈국가합창단’으로 변경했다. 특히 1997년에는 북한 최고의 우상 가요인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우상화 가요를 창작하는 독보적인 악단이 되었다. 공훈국가합창단은 모란봉악단과 유일한 합동 공연을 한 악단이기도 하며 최근 주요한 행사 및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로동신문」을 통해 처음 언급하였으며, 이후 2019년 1월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공식화된 국가 아젠다가 되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치자는 국가 목표이다(전영선 2021, 162).

북한은 2019년 「로동신문」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선언과 함께 가요 <우리의 국가>를 소개했는데 이는 국가상징을 문화적으로 확산하려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방향성과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요 <우리의 국가>는 다른 가요와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일반적인 가요는 공연을 통해 소개되지만 <우리의 국가>는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친필 싸인과 함께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역대 「로동신문」에 소개되었던 가요는 최고지도자 또는 통일과 관련한 가요들이었는데, 국가상징과 관련된 노래는 <우리의 국가>가 최초의 가요였다.

이후 가요 <우리의 국가>는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급 노래로 활용되었으며 북한의 공식 행사에서 국기를 등장할 때 연주되는 국기 등장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한 예술대표단 방중 공연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대표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으로 280여 명의 규모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친선 예술대표단이었다. 이때 참가예술단체로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악단 등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단들이 참가하였으며, <서곡>, <장강의 노래>에 이어 <우리의 국가>를 연주하기도 했다(전영선 2021, 180).

<그림 3> 북한 가요 ‘우리의 국가’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5035200504>> (검색일: 2022.10.25.).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체제에서 제기된 여러 정치적 구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국가상징에 대한 교양 사업은 단순히 국가상징에 대한 이해를 넘어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준법 기풍으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

한 문화예술정책으로 귀결된다(전영선 2021, 181-183).

## 2. 공연예술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은 과학화, 세계화, 현대화를 핵심으로 북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20년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공연되기 전, 전야제로 공연된 <빛의 조화>는 새롭게 시도되는 공연양식의 조명축전이었다. 북한의 공연예술로서 대집단체조는 10만 명 이상이 출연하는 초대형 공연으로 그동안 북한 공연예술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2020년에 선보인 조명축전은 김정은 시대에 처음 시도된 공연양식으로써 평양 제1백화점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음영효과와 색조를 입혀 역동적으로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새롭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대내적으로는 주민통합과 통치의 정당성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는 합법적 정상국가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양이라는 도시 브랜드화와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홀한 빛의 예술’로 불리는 조명축전은 장면 주제에 맞는 효과음과 <단숨에>, <돌파하라 최첨단>,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한 곡들을 편집해 사용하면서 도시 스크린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이지순 2021, 261). 미디어 파사드는 연출 의도에 따라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야기 서사구조로 전달되는 특징이다. <빛의 조화>는 김정은 시대의 지식경제를 표상하는 교육과 과학, 인재양성을 내용으로 시작하여 자강력과 애국,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절정부분에서는 재해복구라는 국가적 내용을 주제로 구성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정당화와 공고화를 내세우고 있다(이지순 2021, 266).

이처럼 조명축전 <빛의 조화>는 김정은 체제의 국가발전 전략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공연 양식으로 김정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성과들을 과시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북한의 발전 노선을 조망해볼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공연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2002년부터 1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공연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2013년 <아리랑>이 공연되고 중단된 후 2018년 다시 만들어진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서 건국의 자

부심을 선전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공연의 전체 흐름은 이전의 <아리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아리랑’공연과 ‘빛나는 조국’ 공연



\*출처: 한경,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176899Y>> (검색일: 2022.10.25.); 서울평양뉴스,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9>> (검색일: 2022.10.29.).

<빛나는 조국>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인민공화국의 건립과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고, 2장에서는 강한 군대와 선군정치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 3장에서는 과학과 산업의 성과를 내는 강국의 이미지와 함께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강조하고 4장에서는 ‘통일’을 주제로 4.27 선언 등을 보여주고 있다. 5장은 ‘국제친선’을 주제로 이전 <아리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서구의 음악이 연주되는데 이는 정상국가로서의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종장에서는 공중에서 드론이 ‘조선아 만세’라는 문구를 새기며 건국 70주년 기념하고 김정은에 대한 헌사가 노래로 흘러나오면서 ‘존엄 높은 인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당을 따라 하늘 끝까지’ 등의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문구가 뒤를 잇는다.

이처럼 공연에서 ‘인민’과 ‘당’을 언급하는 것은 당을 앞세우며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권의 인민은 ‘수령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공화국의 인민’으로 인식시켜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대집단체조에서는 지도자 개인에 대한

송가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정상적인 국가 의례를 진행하며 정상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 3. 무용

김정은 시기의 북한무용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면 민족문화정책의 변화와 선전 선동의 사상 무용을 장려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물질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초점을 두었다면 김정은 시대의 민족문화정책은 비물질 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국가의 오랜 전통성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확인하고 민족문화의 원형복원과 민속무용의 원형보전과 계승 등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김지니 2021, 255).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북한의 정책변화가 이뤄진 시점은 ‘정상국가화’와 ‘경제정책’을 국가발전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터이다. 김정은은 이전의 김일성-김정은 정권의 문화유산정책을 계승하면서도 김정은식 문화유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했고, 김정은식 문화유산정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제도화라 할 수 있다(김지니 2021, 257). 1994년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이 물질유산에 한정된 것에 반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비물질문화유산을 「문화유산보호법」제도 안에 포용시키면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을 구분하여 발굴하고 보존, 계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문명국’을 강조하며 ‘정상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전통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은 전통의 복원과 무용체계의 문화재화라는 두 축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김지니 2021, 259). 특히, 김정은 시기에 변화를 이룬 비물질문화유산의 위상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민속무용이다. 민속무용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면서도 현재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대중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것을 보전·계승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용·창작을 이루는 ‘전통성’과 ‘근대성’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시대에는 비물질문화유산으로 ‘탈춤’, ‘농악무’, ‘돈돌라리’와 같은 작품은 복원하였으며, 민속무용의 움직임, 음악, 소도구 등은 근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립하여 <조선민족무용기본>으로서 무용체계를 갖추고 문화재화 하였다(김지니 2021, 259).

또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무용은 선전선동의 사상무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대표적 선전선동의 사상무용인 북한식 조선춤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도 계승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식 조선춤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내세우며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청년계층의 감성과 행동을 겨냥하면서 대규모 국가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선전선동 목적의 사상무용공연인 「음악무용이야기」는 북한 건설현장을 주요 소재로 하며, 인민복 의상과 격동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사용하면서 선전선동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대표적인 무용공연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공연된 「음악무용이야기」의 제목을 살펴보면, ‘조국을 사랑하라’, ‘조선의 행운’,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영원히 빛나라 선군절이여’, ‘선군태양의 노래’, ‘당을 따라 일편단심’, ‘청춘의 자서전’ 등 주체사상과, 애국주의, 김씨 일가의 우상화, 사회주의 체제 선전, 사회주의 노력 경쟁 등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현주-안지호 2021, 96).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북한무용은 ‘정상국가’로서의 도약을 추진하면서 비물질문화유산으로서 민속무용의 보존과 계승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사회주의 노력 경쟁을 장려하는 선전선동 성격의 사상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4. 체육

체육의 기본 원칙은 제도화된 규칙에 근거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을 겪는 국가 간 관계개선이나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체육을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김일성 시대에는 냉전시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구도 국제관계와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이라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북한체제를 강화하고,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체육을 활용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1990년대 초반 탈냉전이라는 대외환경과 김일성의 사망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체제의 존

속 및 안정을 위해 체육을 이용하였다.

일례로 김정은 시대 북한은 1991년 축구와 탁구 종목에서 남북한 최초의 단일팀을 구성,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국내외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체육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위기 극복하려 했다(허정필 2018, 76).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북한 체제를 이끌고 갈 정치적 기반이 없이 최고지도자 위치에 오른 김정은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정치·경제·국방 영역 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체육정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첫째, 김정은은 집권 이후 ‘강성대국 건설’의 한 수단으로 ‘체육강국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 2011년 신년사에서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며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을 명성 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고(로동신문 2011/01/01), 김정은은 김정일의 의지를 이어받아 ‘체육’을 전면에 내세워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sup>4)</sup> 이후 김정은은 그동안의 성과를 중심으로 북한 체육이 중점적으로 육성할 9개의 ‘전략종목’과 2개의 ‘민속체육종목’을 꼽았고 ‘전략종목’으로는 여자축구, 마라톤, 역도, 권투, 탁구, 레슬링, 유도, 양궁, 기계체조를, ‘민속체육종목’으로는 태권도와 씨름을 제시했다. 김정은이 제시한 전략종목과 민속종목들은 북한이 국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낸 종목으로서 향후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대회에서 ‘입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대내외적인 정권 홍보에 활용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정책성공과를 과시하려는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표 1 참조)

<표 1> 북한의 종목 별 세계선수권대회 성과(1991-2013)

사격			여자축구			탁구			권투			레슬링			유도			체조			역도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4	6	4	3	1	0	14	11	4	7	3	4	2	1	1	7	2	2	7	5	2	10	25	21
14			4			29			14			4			11			14			56		

\*출처: 홍성보(2018), 46.

4)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2015년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서 “체육강국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중시하는 하나의 전선입니다.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야...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 할 수 있으며 주체조선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로동신문 2015/03/25).

둘째, 북한은 체육을 통해 민심을 얻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김정은 시대 체육정치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다른 점은 체육을 통해 인민들의 민심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이며, 인민의 이익과 목소리는 우리 당 정책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언급하며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로동신문 2013/01/11). 이처럼 주민들의 민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김정은은 2012년 첫 시찰장소로 평양민속공원을 찾고 최상의 수준으로 공원을 완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만경대 유희장, 평양 능라유원지, 원산 바닷가 놀이공원 등을 건설하였다(허정필 2015, 454). 이와 같은 체육문화시설의 보수 및 신축은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포시와 원산시에 롤러스케이트장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곳 인민들의 행복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로동신문 2013/05/07).

이외에도 북한은 엘리트 체육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체육강국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체육의 대중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여가 생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하는 것은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전체 인민이 건강한 몸을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로동신문 2015/03/25). 체육의 대중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북한 체육이 국가중심의 체육에서 개인이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개인건강을 증진시키는 유희적 체육(사회체육)으로 변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체제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체육을 통한 개인의 건강 증진이 강조되는 점은 김정은 시대 북한 체육의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체육을 통해 대외관계 및 국가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등장한 김정은은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체육을 활용하였다. 우선 또한 2013년 2월 미국 NBA 출신 데니스 로드만이 모기 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와 함께 방북하여 시범경기를 펼쳤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이런 체육교류가 활성화되어 두 나라(미국과 북한) 인민들이 서로 리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로동신문 2013/03/01).

또한 2013년 9월 북한은 평양에서 아시안컵 역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체육을

통해 지역 국가들과 소통을 시작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자 시 상대에 태극기가 계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면서 외부세계와 고립된 북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림 5> 데니스 로드먼 방북과 평양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1010491>> (검색일: 2022.10.29.); VO A, <<https://www.voakorea.com/a/1750568.html>> (검색일: 2022.10.29.).

이외에도 북한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고, 이후 평창올림픽을 준비과정에서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올림픽에서는 남북단일팀이 참가하는 등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체육을 통해 이루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체육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인권개선과 체육을 연계하여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북한은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20명 규모의 선수단을 참가시켰으며, 2014년 5월에는 ‘조선 룡인(농아)축구단’을 발족하고 2014년과 2016년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현지 팀과 친선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에 잇따라 참가하면서 국제사회에 장애인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국가 이미지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의 증진도 함께 도모했다.

## IV. 남북 문화교류 방향

남북 문화교류의 필요성은 남북관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한반도의 봄’ 시기 남북 문화교류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체육’ 분야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 했으며, 2018년 2월, 북한 예술남의 방남 공연과 같은 해 4월, 남한 예술단의 방북 공연은 ‘공연’, ‘음악’ 분야가 남북관계 개선의 유효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처럼 남북문화교류의 중요성은 남북 간 정치, 군사적인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서로의 문화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낳는 긍정적 효과를 역사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남북 문화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인 청소년층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남북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2018년 중고교생 1,3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반드시 통일 해야한다’는 의견이 31.2%에서 19.8%로 감소했고, 통일이 ‘나와 상관없다’는 의견은 9.2%에서 17.9%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표 2 참조)(이창호 2018, 9).

<표 2> 청소년의 통일인식

(단위: %)

구분	반드시 통일	통일되면 좋음	나와 상관없음	지금 이대로 좋음	계
2008	31.2	41.6	9.2	16.3	100
2018	19.8	50.4	17.9	11.9	100

\*출처: 이창호(2018), 9.

통일에 대해 ‘나와 상관없다’는 의견의 증가는 향후 통일에 대한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분단의 고착화로 인한 남북한 주민 간 문화적 이질성이 더욱 커지게 되어 남북통합과 통일의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문화교류를 통해 미래세대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비롯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하는 과정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IT를 활용한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시대변화를 반영해 문화교류의 방식도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남북 문화교류의 필요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에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여의치가 않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교착되면서 남북 문화교류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재계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해안포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정치·군사 분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북한과의 문화 교류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2018년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교류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 시점이 현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첫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형성’을 위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분단의 시간이 70여년 이상 지속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남북한 사회 모두에서 ‘6.25 전쟁의 기억’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사회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과거 남북 문화교류는 분단 이전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 강조되었고, 이는 ‘동질성 회복’이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세대가 남북한 사회의 주역이 되는 현 시점은 ‘새로운 동질성 형성’을 통해 통일과 통합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현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음악, 공연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문화교류가 추진된다면 문화가 가지는 파급력과 전파력으로 인해 미래세대 간 ‘새로운 동질성 형성’은 기성세대가 창출하지 못한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의 ‘현대화’ 정도가 남한 기준에서는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의 문화가 북한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은 경계해야 하며, 남북한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는 여전히 중요하다. 향후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민족이

같은 언어, 역사, 생활풍습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와 언어, 생활풍습에서 기인하는 '감정'의 영역은 변치 않고 존재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비물질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앞의 '무용'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탈춤'이나 '농악무' 같은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의 복원을 북한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시작되어 남한에서 전승된 '전승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극 공연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역사 공연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한 주민 모두가 세대를 넘어 민족적 자긍심을 함께 느끼고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재해석은 남북한 정치체제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교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문화의 국제화 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음악, 공연, 체육 등 문화 전반에 걸쳐 국제적 흐름을 수용하고 국제 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문화교류가 남북 양자 교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 분야 별 여러 국제 이벤트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남북한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되고, 향후 통일 및 통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 V. 결론

문화정책은 국가와 정치집단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북한 역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도 사회주의 체제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양성을 위한 혁명화의 수단으로 '문화'를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 문화정책의 특징은 크게 '백두혈통을 통한 정통성 확보', '정상국가를 추구하는 현대화 국제화', '사회주의 문명강국 달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김정은은 갑작스러운 권력승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제 정당성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와 중첩시키고자 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김정은은 외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북한식 세계화와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문화는 기존의 ‘민족적 전통’과 ‘현대적 문화’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와 요구에 맞는 문화 분야의 변화를 통해 현대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라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 기초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음악 분야에서는 기존의 음악과는 차별화된 서구 음색과 창법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 국가제일주의’ 기치아래 국가상징을 문화적으로 확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연 분야에서는 과학화, 세계화, 현대화를 핵심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기존 대집단체조 ‘아리랑’을 대신하는 ‘빛의 조화’ 공연에서는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공연예술 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무용 분야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과 같이하여 전통의 복원을 통한 무용체계의 체계화와 선전성동을 위한 사상 무용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체육을 ‘강성대국 건설’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심확보를 통한 리더십 공고화 수단,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체육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정책의 기초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형성을 위한 교류 추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추진’ 등 2가지 남북 문화교류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한 사회 모두에서 ‘전쟁의 기억’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사회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해 남북한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새로운 ‘동질성 형성’을 이루어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민족이 공유하는 민족의 역사를 함께 되새겨 민족의 ‘동질성 회복’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문화의 국제화를 적극 활용해 남북한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점을 함께 되새기고 향후 통일 및 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는 남북문화교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엮음(2004). <조선말 대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 논문

김지니(2021). 김정은 시기 무용연구 -전통의 복원과 비물질무용유산 중심, <북한학연구> 17권 2호.

박정란(2014). 문화예술로 김정은 이미지 구축, <월간북한> 통권512호(2014년 8월호).

배인교(2018). 21세기 북한 민족음악의 변화 양상. <한국예술연구> 제22호.

이성춘·고재권(2020). 북한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1호.

이지순(2021). 김정은 시대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북한의 새로운 공연양상 조명축전 <빛의 조화>. <한국예술연구> 제34호.

이창호(2018). 청소년의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통일 의식 함양 및 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전영선(2012). 김정은 시대 북한문화예술의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2년 10월호.

전영선(2021).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2호.

정영철(2017).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의 변화. <문화정책논총> 제31집 2호.

천현식(2015). 모란봉악단의 음악정치. <2015년 통일부 신진연구논문집>

허정필(2015). 김정은시대 체육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제6호.

허정필(2018).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과 북한의 스포츠 정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주요특징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3호.

홍성보(2018). 김정은은 왜 '스포츠'에 몰두할까?. <월간북한> 통권555호(2018년 3월호).

현주·안지호(2021). 북한무용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6권 1호.

### 3. 신문

노컷뉴스(2013/03/01). “北 김정은, 악동 “데니스 로드맨”과 농구 경기 관람”. <<https://www.nocutnews.co.kr/news/1010491>> (검색일: 2022.10.29.).

서울평양뉴스(2018/09/12). “중국 관광객들, “北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 관람 신

- 청 급증””.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9>> (검색일: 2022.10.29.).
- 연합뉴스(2019/01/06). “北 ‘우리의 국기’ 노래 띄우기…‘국가제일주의 구현한 명곡’”.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5035200504>> (검색일: 2022.10.25.).
- 조선의 오늘(2020/01/20). “조선전자음악에 깃든 사연”. <<https://dprktoday.com/news/39115>> (검색일: 2022.10.29.).
- 한겨레(2013/08/27). “북한의 걸그룹 ‘모란봉악단’ 뜨면 삼촌팬 들썩”. <<https://www.hani.co.kr/arti/PRINT/601033.html>> (검색일: 2022.10.24.).
- 한경(2018/03/17). “북한, ‘아리랑 공연’ 올해 재개… 중단 4년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176899Y>> (검색일: 2022.10.25.).
- NKICT(2016/05/12). “북한 “원균 무능하고 출세욕에 환장””. <<http://nkict.com/archives/tag/%EB%B6%81%ED%95%9C-%EB%A6%AC%EC%88%9C%EC%8B%A0>> (검색일: 2022.10.29.).
- The JoongAng(2016/02/17). “순가락으로 부하 약 떠먹여주는 김정은…실명 소설 ‘불의 약속’ 내용 보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585234#home>> (검색일: 2022.10.29.).
- VOA(2013/09/16). “평양 국제역도대회, 태극기 게양-애국가 방송”. <<https://www.voakorea.com/a/1750568.html>> (검색일: 2022.10.29.).
- 로동신문(2011/01/01).  
\_\_\_\_\_ (2015/03/25).  
\_\_\_\_\_ (2013/01/11).  
\_\_\_\_\_ (2013/05/07).  
\_\_\_\_\_ (2015/03/25).  
\_\_\_\_\_ (2013/03/01).

## Cultural Policy in the Kim Jong Un era and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Park, Young Ha

Seoul Christian University

### Abstract

In the Kim Jong Un era, North Korean cultural polic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Securing legitimacy through Baekdu bloodline',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pursuit of a normal state', and 'Achieving a powerful socialist civilization'. North Korean culture in the Kim Jong Un era can be seen as having a complex character in which the 'national tradition' and 'modern culture' are combined.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policy of the Kim Jong Un era, this thesis examines the status of each culture, such as music, performing arts, dance, and sports, and promotes 'exchanges to form homogeneity' and 'exchanges to restore homogeneity' between the resident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suggested two directions for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a new generation without "memories of war" is growing as a social leader, so future generations must form a new "homogeneity" and lead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integration. In addition, the "recovery of homogeneity" of the nation should be promoted together by reflecting on the history of the nation shared by our people.

Key  
words

North Korean Cultural Policy, Music, Performing Arts, Dance, Sports



## 美 바이든 행정부의 '對中정책'과 '北中관계' 동학: 美中 '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김남성

광운대학교 한반도메타버스연구원 연구실장  
kns1948@naver.com

### 초록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정책은 외교적 경쟁을 넘어 군사적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本) 논문은 '미중관계'가 트럼프 정부에 이어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될 때 '북중관계'는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비대칭동맹인 북중관계의 과거 동학(動學)을 살펴보고, 북중관계가 어떤 변수에 따라 변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중관계는 '중국의 대(對)패권국 관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본(本) 논문은 중국이 지난 70년 동안, 특히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주로 '당대의 패권국과 관계'에 따라 북중동맹을 관리해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비대칭 동맹의 약소동맹국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중국과 패권국 관계의 갈등' 정도에 따라 대체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처럼 미중관계가 '경쟁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동맹안보딜레마'는 커지게 되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는 우파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한미일' 동맹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국내 여론 분열, 중국과 미국의 상호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제어 | 미중관계, 바이든 대중정책, 중국의 대패권국 관계, 북중관계, 비대칭동맹

## I. 머리말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공화당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은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반대해왔지만, 대(對) 중국 정책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중국 강경론자인 커트 캠펬를 대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캠펬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동맹 협력체로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10국 연합체’(D10)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인물이다(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2021).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부터 중국 견제용 ‘4자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 등 인도 태평양 국가 등을 추가 가입시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최악으로 전락한 한일관계의 개선 노력 외에도 Quad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중국 압박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은 집권 후인 2021년 3월 3일 백악관에서 공개한 ‘국가 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이라는 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서 “민족주의의 발흥, 민주주의의 퇴조, 러시아, 중국 및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 증가, 그리고 기술 혁명의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며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정의했다(The White House 2021).

보고서는 ‘중국’과 관련된 언급은 모두 열여덟 번인 반면,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다섯 번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경쟁 위협국가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관련 현안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주도해야 하고,<sup>1)</sup>

1)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에 민주주의를 재활성화 시켜야 하며, 민주주의와 관련된 의제들은 미국의 장점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세하게 만들 것이다. 또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및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인 타이완을 지원하고 홍콩, 신장,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고 현대화시킬 것임을 명시했다.<sup>2)</sup>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위협한다면 미국은 미국의 노동자, 선진 기술, 전략적 이점, 국가 경쟁력에 해를 끼치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행위, 사이버 해킹(cyber theft),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관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The White House 2021).

일각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명시된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내용을 두고 ‘가치 대결’(value war)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김성한, 2021). 보고서에서 중국을 강압적(assertive) 국가, 경제적 약탈자(predator) 등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중국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임을 부각, 공략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적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나라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자국의 부상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외교에서 일대일로, 군사안보분야에서 강군전략, 경제분야에서 쌍순환 전략 등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백신외교와 ‘일대일로’등을 통한 경제 협력을 통해 친중 국가를 규합하고 특히 중국의 ‘국가핵심이익(國家核心利益)’ 침해에 공세적 외교로 대응하고 있다(최재덕 2021).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과정에서 ‘국가핵심이익(國家核心利益)’에 대한 개념화와 공식화 등을 통해 자국의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있다(이민규 2017).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21년 2월 11일 바이든과 통화를 하면서 대만, 홍콩, 신장 등의 이슈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자 주권과 관련된 일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히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정치국원도 2021년 2월 초 미중관계 전미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연설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견해와 우려를 존중하여

티베트의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보호할 것이다.”(The White House 보고서, 18-21 참조).

2) “NATO, 호주, 일본, 한국을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 자산이며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다른 ASEAN 국가들과도 파트너십을 심화시킬 것이다.”(The White House 보고서, p.10 참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한다”며 “홍콩, 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국가 존엄, 그리고 14억 중국 인민의 감정과 관계된 문제로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될 하나의 ‘레드라인’이며 이를 건드리는 것은 중미관계와 미국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김지운 2021).

중국 언론도 이에 발맞춰 2021년 3월 설전으로 시작해 공동발표문 없이 끝난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공개적인 맞대결을 펼친 회담으로 중국 외교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핵심이익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세계에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최재덕 2021)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미중의 패권경쟁은 현재로서는 장기화, 구조화되는 추세이다. 미중 양국의 경쟁은 인도태평양, 한반도 등지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다방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미중경쟁 심화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동맹 강화와 협력에 대한 수요와 압박이 증대될 것이며, 이에 반발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참여하지 말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역(逆)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사드’ 기지 건설 때 보여준 중국의 압박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전략적 자율성에 큰 제약을 줬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결국, 지난 냉전 시대처럼 ‘북중러’ 북방 3각 동맹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의 형성에 따른 갈등과 제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과 어긋나는 ‘한일 관계 개선’ 내지는 ‘한일 군사안보적 협력’ 압력이 높아질 경우, 한국 국내 정치 지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무엇보다 미중 패권경쟁은 북한과 중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난 70여년간 중국은 주로 당대 패권국과의 관계에 따라 북중관계를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은 12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핵실험 협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

3) 실제로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4년 9개월 만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조선일보 2022/06/30).

어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막기 위해,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대응보다 중국과 관계를 더 중시하거나,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까?

본(本)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견제와 압박으로 지속되며, 미중관계가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때 ‘북중관계’는 어떤 양상을 띠게 되지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비대칭동맹인 북중관계가 과거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이 어떤 변수에 의해 북중관계를 관리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특히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주로 ‘당대의 패권국과 관계’에 따라 북중관계를 관리해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비대칭 동맹의 약소국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중국과 패권국 관계의 갈등’ 정도에 따라 대체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미중관계가 경쟁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동맹안보 딜레마는 커지게 되며 이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립 입장’ 견지보다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 II. 중국의 대(對) 패권국 관계와 ‘북중관계’ 동학

중국은 지난 1949년 이른바 ‘신중국’ 수립 이후 ‘혈맹’이라는 북한과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북중관계’는 ‘경제의 사이클’처럼 ‘상승-고점-하강-저점’을 반복해왔다. 스스로 혈맹이라고 부르는 양국 관계가 이처럼 고저를 이루게 된 것은 ‘비대칭동맹’의 약소국 동맹인 북한의 ‘약소국의 힘’이 언제 증폭되고 언제 감소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sup>4)</sup>

4) 북한의 ‘약소국의 힘’, 비대칭동맹의 ‘안보딜레마’ 등에 대한 논문은 Michael Handel(1981), Walt Stephen M(2016), Glenn H Snyder(1997), 김남성(2019)등에서 참고할 수 있다.

<표 1> 중국의 對 패권국 관계와 북중관계 분석표(1949년~현재)

		북중 관계	
		배신과 방기	전략적 가치
중국의 對 패권국 관계	경쟁과 갈등	중국의 배신 우려	북한 높음
	안정과 협조	북한의 방기 우려	중국 높음

\*출처: 김남성(2019)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북중관계’는 중국의 대(對) 패권국 관계라는 독립변수에 따라 주로 변화해왔다. 즉 중국의 당대(當代) 패권국과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일 경우, 북한의 ‘약소국의 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약소동맹국인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방기’하려는 정책을 취했고, 반면에 중국은 북한에 ‘배신’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반면에 중국과 패권국 관계가 ‘안정과 협력’일 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중국은 약소동맹인 북한을 적절하게 제어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맹 적대국인 미국과 한국 관계에 더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1992년 한중수교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강대국 동맹인 중국에게 극도의 ‘방기’ 우려를 느끼면서 김일성 생전부터 추진해 온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다. 1993년 1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한 것은 우연히 아니다.

결국 중국은 당대 패권국과 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동맹안보딜레마’를 겪으며, 상황에 맞게 북한을 관리하고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 1. 중국의 대(對) 패권국 관계: 대립과 갈등

북한은 지난 1950~60년대 중소분쟁 기간에 중소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양국을 오가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북한은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의 ‘1인 독재’

비판과 ‘평화공존’ 노선을 지지할 수 없었지만 소련이 제공하는 각종 해군, 공군력은 자국의 안전보장에 매우 절실했다. 1962년부터 63년까지 중국은 소련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특히 소련 지도부는 1962년 11월 5일부터 1963년 1월 21일까지 5개 동구국가의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반중국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때 김일성은 소련에게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보내면서 각종 원조 리스트를 제시했다. 중국은 약소동맹인 북한의 행동에 오히려 ‘배신’ 우려에 빠지며 ‘안보딜레마’를 겪었다. 이 때문에 북중동맹은 냉각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초반인 1966년 양국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일부 홍위병들이 북한의 김일성을 비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문화대혁명을 비판하자 반발했지만, 공산권 패권과 영토를 놓고 자국과 대립하고 있는 소련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196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20주년 기념식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고, 북한도 당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최용건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며 북중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김남성 2019) 당시 북한은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半) 수정주의자로’ 간주되고 있었지만, 최종 순간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끌어안은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모습을 볼 때, 중국은 비대칭동맹의 강대국 입장에서 동맹안보딜레마를 겪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냉전 당시 소련은 ‘북중동맹’의 적대 동맹의 강대국도 아닌, 같은 공산주의 블록의 중요한 핵심 국가였다. 하지만 중국은 패권국가인 소련과의 갈등과 경쟁을 겪으면서 약소동맹국인 북한이 오히려 소련에 ‘편승’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배신 시도를 묵과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자국을 ‘배신’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쟁 패권국인 소련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비대칭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벌어진 북한의 6차례 핵실험때 기간의 ‘북중관계’ 동학도 앞선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됐다. 미중관계는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과 수 십차례의 각종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는 동안 서서히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 오바마 1기(2009년) 이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외교노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연 10%를 넘나드는 경제 성장을 통해 대국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초기에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적 관계를 이루려고 했으나,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아태 재균형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국과 본격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대우를 미국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중국의 요구사항이 담긴 정책이 2013년 시진핑이 본격화시킨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다. 신형대국관계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대외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기존 대국(大國)인 미국과 떠오르는 대국인 중국이 싸우고 대립하지 말고 중요 국제 문제에 있어 미중이 협력(cooperation)과 조화(coordination)를 이루자는 제안이다. 한마디로 중국에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들과 상의하라는 것이며 이는 굴기(崛起)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힘을 인정해 주면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시진핑이 '신형대국관계'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핵심적인 문제는 당연히 '아시아'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축적한 경제적 자산을 토대로 전통적인 안방인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외교, 군사, 경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때문에 필리핀, 일본 등과 영토 분쟁을 감수하기도 하고 인도, 파키스탄 등과 군사,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강온 전략'을 구사해왔다(김남성 2016) 하지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시진핑이 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경쟁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자 '북중관계'의 균형추는 북한으로 기울었다. 중국은 6차에 걸친 북핵실험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일부 찬성하거나, 북한에 표면적으로만 강경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전부였다. 국제사회는 2006년(1차 핵실험)과 2009년(2차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 책임을 물어 유엔결의안 1718, 1874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주권과 형평성 존중을 이유로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2009년 11월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을 방문해 '북중 양국간 군민의 우호적 협력과 교류'를 강조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홍석훈 2014)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핵화-평화협정' 연계를 주장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016년 2월 26일 공개석상에서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간 평화협정이 없다면, 핵문제도 풀 수 없다'는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중국은 2016년 9월 9일 실시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제재의 정도,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결의안 2321호는 역대 대북제재안 가운데 채택까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당

시 중국이 4차 북핵실험 이후와 마찬가지로 석탄 수입 금지 조항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석탄수출제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의 의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차 북핵실험 이후 9일 만인 9월 12일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sup>5)</sup>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채택에 동참하자 북한은 매우 반발했다. 당시 북중 양국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날선 비난을 주고받으며 양국의 최고위급 인사들 교류가 잦아드는 등 대외적, 표면적으로는 긴장 관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모습은 대외적,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했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당일에도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에 제동을 걸었으며 ‘6차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중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원유차단 요구’에도 난색을 표하며, 제한적인 원유 차단에만 동의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중의 ‘경쟁과 갈등’ 상태가 심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한 동맹관계를 강화하려고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2018~2019년 1, 2차 미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차이나 패싱’ 우려감을 극대화해 불과 1년도 안 돼 시진핑과 네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물론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은 물론이다. 중국에서 열린 4차례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은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해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을 열었다. 중국은 시진핑-김정은의 정상회담 이후, 노골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며 북중동맹 관계를 과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대(對) 패권국과 관계가 ‘대립과 갈등’ 상태가 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중국은 약소국 동맹인 북한에 오히려 ‘배신’당할 우려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때문에 패권국가들과 갈등에 ‘연루’되는 것도 방지해야 하지만, 북한이 자국을 ‘배신’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중 지도자의 개별 특성, 양국의 국내외 여건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지만 중국이 당대 패권국인 대미(對美)관계가 ‘안정과 협조’로 전환되

5)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합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연 400만 배럴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수출 역시 전면 금지했으며, 해외진출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 않는 한, 전통적인 ‘북중동맹’은 여전히 ‘혈맹’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중국의 대(對) 패권국 관계: 안정과 협조

앞서 언급한대로, 1960년대 말 중국은 당대 패권국인 미국과 소련 두 나라와 모두 ‘대립과 갈등’ 관계였다. 이때문에 마오쩌둥은 일단 눈앞의 적이자 최대 위협인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블록 패권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연민제소(聯美制蘇)’의 필요성을 느꼈다. 즉 미국과 전략적 연대를 통해 소련과의 갈등과 위협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절박성은 1970년대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현대판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재현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중 데탕트 시대가 열리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핵심 안보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중국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소련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안정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한반도는 미중 양국이 공동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당시 중국은 북한 김일성이 원했던 공세적이고 현상타파적인 ‘혁명전략’이 아니라 방어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안보전략’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바라본 것이다.

마오는 1970년 10월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현재 세계대전이 발생활 가능성은 비교적 적는데 이는 나름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미국)가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발언은 ‘전쟁불가피론’을 통한 국제적 ‘긴장’ 조성이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이는 김일성의 한반도 ‘혁명전략’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최명혜 2008).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현상유지 정책이 유지되고, 중국이 자본주의 패권국인 미국과 관계를 ‘안정과 협조’로 가져가면서, ‘북중동맹’에서 북한의 ‘방기’ 우려감은 점점 높아졌다. 1960년대 중소분쟁 기간 중 중국과 소련을 오가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갔던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1970년대 내내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현상 유지 정책을 지속

하면서 북한의 애를 태웠다.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을 내세웠던 카터마저도 당선 후에는 공약을 철회했다.

1970년 닉슨 대통령때부터 시작된 미중 대탕트는 덩샤오핑이 1978년 11차 3중 전화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1979년 미국과 정식 수교를 맺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안정과 협조’ 쪽으로 이끌어갔다. 특히 덩샤오핑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도광양회’를 외교전략으로 채택하면서 1990년대 중국의 일관된 외교 노선이 됐다.<sup>6)</sup>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전략은 이제 막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이 당대 패권국인 미국과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의 개혁개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자국이 미국과 갈등에 ‘연루’되는 상황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북한의 협조와 지지 요구에 최소한의 응대를 하는 ‘정관기변’(靜觀其變)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무 간섭 없이 사태의 변화만을 지켜보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라는 ‘최후선’(bottom line)만을 지킨 상태에서 동맹국 북한을 자제시켜 나간 것이다.

당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발시키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며 미국의 각종 대북 제재를 받았다. 당시 중국은 UN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1998년 2월 17일 외무부가 작성한 토의 결과 보고서에는 “소련을 제외한 중공과 잠비아 등 친(親)북한 공산국가조차 중립적 발언을 하거나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알제리와 브라질이 발언하지 않은 점은 북괴 만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월간조선 2019/06).

또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을 반대했는데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2년 8월 한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다. 한중수교는 북한 외교의 고립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북한은 핵사찰 문제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공산 진영이 속속 무너지면서 고립무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때 북한은 중국에 대한 ‘방기’ 우려감을 느끼면서 최

6) ‘도광양회’는 중국은 “패권을 칭하지 않을 것이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堅持不當頭, 不稱霸的原則, 不謀求勢力範圍, 不搞政治集團, 不干涉別國內政)

대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교섭을 진행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북한은 1994년 미국 주도의 NPT를 탈퇴하면서 ‘1차 핵위기’를 시작으로 20여 년에 걸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당시 중국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화되자 약소동맹국인 북한의 지지와 협조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적대 강대국인 미국과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전형적인 ‘동맹안보딜레마’에 빠진 중국의 선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인 해결’이었다. 따라서 1차 핵위기 내내 중국은 “미북 양국 간 대화와 협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2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리지안잉(李建英)은 “남이든 북이든 혹은 제3국의 한반도 핵무기의 도입을 반대한다”면서도 “중국은 참여하지 않으며 북미 양국 간의 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남성 2019).

이처럼 엉거주춤한 중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에 실망감을 줬을뿐더러 동맹국 북한에게도 심각한 ‘불신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중국이 패권국인 미국과 관계에 따라 ‘북중동맹’을 관리한다는 판단이 서자 중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방기’ 우려를 겪으면서,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 절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은 대(對) 패권국 관계가 안정과 협조로 갈수록 북한의 고립감은 심해지고 결국 ‘방기’ 우려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197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요구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거래를 요구했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매달린 것은 북한의 ‘방기’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북중은 ‘혈맹’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일반 국가 관계로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비고비 때마다 북한에 정치 및 군사적 지원을 베풀었다. 만약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아직 정치·사회적으로 취약한 중국에 중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 Ⅲ. 바이든 시대 ‘대중(對中)정책과 미중(美中) 갈등

지난해 초 발간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잠정적 지침서’는 과거와 같이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없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세계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이 개방된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 및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더불어 권위주의적인 진영에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1).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2021년 3월 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현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이자 경쟁자라고 규정했으며, 중국을 다룰 때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분명히했다(한국경제 2021/03/04).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외교정책은 올해 초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보고서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민정훈 2022).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보다 연결되고(connected), 번영하고(prosperous), 안전하고(secure), 회복력 있고(resilient)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이 향후 12~24개월 동안 추진할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출범했으니, 올해와 내년까지 즉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반까지 ‘대중(對中)’ 행동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이 증대되면서 미국의 지역 관여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및 규범을 변경하는 데 성공할지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동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내적 역량 강화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최대한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정책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트럼프때와 같이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처하고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서술했다. 해당 행동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은 핵심이익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요구하며, 이는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인 제도, 자유로운 언론, 지역의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해 투자하며 지역의 영해와 영공이 국제법에 따라 지배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또 핵심 신기술, 인터넷, 사이버 공간 등에 대한 공통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공동의 역량을 키워 나갈 때만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지역 동맹의 심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간 유대 강화, ▲강력하고 독립된 아세안(ASEAN)의 동남아시아 주도, ▲쿼드(QUAD) 강화,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리더십 지원 등을 강조했다.

셋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주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통한 새로운 무역 접근법,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개발 및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동 투자,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를 통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무역 및 투자 촉진,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영토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역지력 강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및 상호 운용성 향상,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우주, 사이버 공간, 핵심 기술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한일 동맹국과의 확장역제 및 공조 강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을 통한 안보 협력 지속,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

해안경비대의 주둔 및 협력 확대,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및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와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하는 외교 정책의 시기에 진입했다고 명시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미국이 21세기 도전에 맞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진할 수 있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번성하고 미국과 세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핵심이익이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미중 관계가 초기 주요 국가관계에서 강대국 경쟁, 패권경쟁 그리고 현재 전략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경쟁범위가 외교·군사적 측면에서 경제,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의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미 의회조사국(CRS)은 2021년 미·중 간 전략경쟁을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 간 경쟁 분야와 국면을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연말 즈음하여 CRS가 미·중 간 전략경쟁의 큰 이슈들에 대해 평가 및 전망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서 정리한 의회조사국의 2022년 미중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방면에서 경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국방일보 2022/01/04).

CRS 보고서는 2022년 포괄적 안보환경과 미·중 간 경쟁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미중간 경쟁 양상이 초기의 ‘누가 더 우세를 보이는가’에서 ‘누가 세계를 주도하는가’의 경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엔 군사적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바라봤다. 보고서는 대표적 사례로 2021년 10월 5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안녕! 강대국 경쟁, 이제는 전략경쟁이야!(Goodbye! Great Power Competition, Hello! Strategic Competition)” 라는 논단을 발표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CRS 보고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중간 군사적 경쟁 국면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 주변국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으며 중국과 접경한 유라시아에 대해 미중간 군사적 대립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장악하기 위한 대전략 수립 경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다시 중국의 반발을 부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11월 29일 발표된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 검토(GPR)’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원위치로 돌리며, 중동과 아프간에서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 또는 철수하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전진 배치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전진 배치를 증강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2021년 8월 31일 미국은 지난 20년간의 ‘끝없는 전쟁’을 종료하였으며,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그동안 소홀했던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적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면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MDO),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DMO), 공군의 신속한 전투임무수행전략(Agile Combat Employment, ACE), 해병대의 첨단원정해외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EABO), 경쟁적 전장환경에서의 연안작전(Littoral Operation in a Contested Environment, LOCE) 등이다.

이러한 새로운 군사적 작전 개념의 발전은 첨단 재래식 무기와 군사과학기술의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첨단 재래식 무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으나,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인 바이오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양자 컴퓨팅, 사이버 작전, 무인화, 자율화,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2022년에 미국 국방성은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미중간 새로운 군사과학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시화되면서 속력과 거리, 화력에 집중된 재래식 무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앞서 살펴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와 ‘CRS 보고서’에 나타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정책은 일종의 외교적 대립이었던 미-중 간 전략경쟁이 군사적 전략경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사적 전략경쟁 양상은 실제로 대만 독립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양국의 군사 무력시위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첨단 무기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IV. 결론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사일 도발 횟수를 늘렸다. 북한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회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은 3회에 불과했으나, 올해 2022년 5월까지 13회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1월 한 달간 모두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12월 이후 월간 통계로는 최다다. 지금까지는 김정은 집권 3년 차였던 2014년 3월과 7월에 각각 6차례씩 미사일 등을 발사한 게 지금까지인 최다였다. 또 대체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2년과는 달리 올해는 벌써 4차례나 ICBM을 발사하는 등 한층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며 대북제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중국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됐다. 중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옹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중 북핵 수석대표 전화 협의에서도 중국은 기존의 주장대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한 데 비해 중국 측은 미국의 제재가 만능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YTN 2022/01/22).

이같은 중국의 태도는 비대칭동맹의 강대국 입장에서 약소동맹 북한의 도발로 미국이라는 경쟁 강대국과 갈등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본 논문이 제시한 대로, 중국이 미국과 경쟁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중관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북한의 배신 우려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도 북중관계에서 자신들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외무성 홈페이지에 '조중친선의 갈피를 더듬어'라는 제목으로 북중관계 관련 일화를 소개하는 글 5편을 게재했는데,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친선관계 일화를 담은 내용들이었다. 북한 외무성은 북중관계에 대해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 속에서 맺어진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은 '항장원화(抗蔣援華)'(국민당에 맞서 공산당을 도움)와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로 이어졌으며 사회주의

를 건설하는 길에서 서로 지지하는 진정한 동지적 관계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관계로 끊임없이 공고 발전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김정은 동지와 시진핑 동지 사이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기의 생명력을 과시하며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YTN 2022/04/21).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중국과 군사전략경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격화되고 확대된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은 결국, 북중관계에서 북한의 전략가치 상승과 중국의 배신 우려감 증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중관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은 강대국 동맹인 중국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G2의 당사자인 중국이 북한 김정은의 잇단 도발, 특히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인 조치는 차치하고 추가적인 경제제재조차도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중국이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미중간 경쟁과 갈등의 심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동맹관계 강화는 자연스럽게 한중일, 이른바 남북 3각동맹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 미국과 동맹 강화는 군사적 협력 증대가 필수적이며, 이는 북한 김정은과 국내 좌파층의 반발로 이어져 국지적 도발과 한국내 정치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미일 군사적 협력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내 여론 분열이 따라올 가능성도 높다.

셋째,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권 시절 사드 배지로 겪었던 중국의 반발과 압박이 재현될 수 있다. 중국은 벌써부터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한국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식 가입한 데 대해서는 중국 관영 매체가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Global Times 2022/05/05).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국의 우파와 중도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지지층의 기대와 함께, 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도발 책임을 한미동맹 강화에 돌릴 한국 좌파의 비난을 돌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북중관계가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혈맹’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상수(常數)로 봐야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지난 70여년간 당대 패권국과 갈등을 겪을 때 북중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배신’ 우려감이 높아졌다. 그럴 경우, 중국은 북한의 수많은 대미, 대남 도발에도 결국 북한의 손을 들어주며, 최고지도자나 지도부간 회담과 교류를 통해 ‘북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본(本)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다루지 않았으나, 북중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북중관계는 ‘상승-하강-냉각’의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중관계의 미묘한 틈이 생길 것을 감안해 상황과 시기별로 외교정책적 대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북중관계가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앞선 문재인 정부처럼 지나치게 중국으로 경사(傾斜)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우려가 있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은 국내 중도와 보수 여론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7)</sup>

7)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새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8%는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북한·중국·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인 반면 미국·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68.0%에 달했다.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7%였다. 외교·안보 분야 역시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4%, 북한·중국·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는 답변은 6.1%였다.”(YTN 2022/04/04).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최명해(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 The White House(2021).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The White House: Washington, D.C.
- Glenn H Snyder(1997).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ichael Handel(1981).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 Walt Stephen M(2016). 박민형·김성아 역. <동맹의 기원>. 고양: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정보장문제연구소.

### 2. 논문

- 김남성(2019). 중국의 對 패권국 관계와 북중관계 변화-비대칭 동맹과 동맹안보 딜레마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남성(2016). 3, 4차 북핵실험을 통해 나타난 북중 관계와 동맹 딜레마.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Vol 2, No.1.
- 김지운(2021). 바이든 행정부 시기 중국의 대미외교 전망: 공세성의 원인과 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제14권 1호.
- 김성한(2021).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전략: 봉쇄에서 변환으로. <新亞細亞>, 제28권 2호
- 민정훈(2022).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IF>, 2022-05 Kpp.
- 이민규(2017).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제41권 1호.
- 최명해(2008). 중국의 대미 데탕트 시도와 북중동맹 관계 재조명. <아세아연구>, 제51권 3호.
- 최재덕(2021). 미-중 패권경쟁과 한중관계. <미중 경쟁 하 아시아정세와 한국외교의 과제 자료집>.
- 홍석훈(2014). 중국의 대북한 외교정책 기조와 전략-중국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선호도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7권 1호.

### 3. 인터넷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Balance and Legitimacy”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0661>> (검색일: 2022.07.01.).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1-12/how-america-can-shore-asian-order>> (검색일:2022.07.02.).

국방일보(2022/01/04). “2022년 미·중 간 전략경쟁 양상 전망”.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20104/1/BBSMSTR\\_000000100072/view.do](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20104/1/BBSMSTR_000000100072/view.do)> (검색일: 2022.07.09.).

월간조선(2019/06). “韓美日 철석 共助, 유엔 安保理에서 북한 정권 단죄”.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906100026>> (검색일: 2019.05.18.).

조선일보(2022/06/30). “한미일 정상, 5년만에 3각협력 되살렸다… 北 돈줄 옥죄기 공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0661>> (검색일: 2022.07.25.).

한국경제신문(2021/03/04). “블링컨 “북·러·이란 도전과제지만 중국이 최대 지정학적 시험””.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041181Y>> (검색일: 2022.07.15.).

Global Times(2022/05/05). NATO pulling Seoul closer shadows stability in NE Asia, even Indo-Pacific.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5/1264902.shtml>> (검색일: 2022.07.25.).

YTN(2022/01/22). “中, ‘北 도발 위협’ 옹호 계속...한중 정상 소통 1년 중단”. <[http://www.ytn.co.kr/\\_ln/0101\\_202201220449427133](http://www.ytn.co.kr/_ln/0101_202201220449427133)> (검색일: 2022.07.25.).

YTN(2022/04/04). “국민 10명 중 9명 “새정부, 미국과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3030600003?input=1195m>> (검색일: 2022.07.25.).

YTN(2022/04/21). “유례없는 특수관계...北, 중국과 80년 친선史 시리즈로 소개”.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1091300504?input=1195m>> (검색일: 2022.07.25.).

# Dynamic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Focusing on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KIM NAM SUNG**

KwangWoon University  
Korean Peninsula Metaverse Research Institute

---

## Abstract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seems to presuppose military competition beyond diplomatic compet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dict what kind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ll take when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continues and deepens follow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past dynamics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 asymmetric alliance, and examine what variables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has changed.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China relations have been most affected by 'China's relations with hegemony'. This paper will show that China has managed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over the past 70 years, especially in the face of North Korea's six nuclear tests, mainly according to 'relationships with the hegemon of the time'. This is because the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a weak ally of the asymmetric alliance, is largely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hegemon'. Therefore, if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in the US–China relationship continues as it is now, China's 'alliance security dilemma' will increas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China will support the North Korean Kim Jong un regime and strengthen their alliance despite North Korea's successive provocations.

This can act as a difficulty in that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which is supported by the right–wing conservatives, is increasingly demanding to strengthen the "US–South Korea–Japan" alliance, resulting in division of domestic public opinion and mutual pressur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

Key | North Korea–China rela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

words	China, asymmetric alliance, competi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s with the hegemon of the time,
-------	---

---



# JNKS 편집 및 심사규정

## JNKS Editorial Standards and Peer Review Process

3차 개정일 2022. 12. 01.

2차 개정일 2020. 09. 01.

1차 개정일 2016. 12. 02.

제정일 2015. 03. 01.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약칭 JNKS, 이하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 간사로 구성된다.

#### 제3조 (편집위원장의 자격 및 선임)

1. 위원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을 고려해 발행인이 선임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1.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편집 간사의 자격 및 선임)

위원회의 원활한 연락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예심을 진행하여 초심 여부를 결정
  - 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다.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라. 논문 심사 및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제3장 학술지의 발간

### 제7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학술지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학술지 투고전용 시스템(jnks.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2.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북한학과 관련된 논문 또는 북한학의 인접 분야의 논문이어야 한다.
3.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본 학술지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4. 학술지에 문헌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가. 문헌연구는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의 각 연구영역에 있어서 이론적, 방법론적 전환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2편 이상의 주요 문헌(논문 혹은 저서)들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평론을 의미한다.
  - 나. 문헌연구는 연구논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 다. 원고의 분량, 심사규정 및 절차 등 기타 사항은 일반 논문과 동일하다.
5. 학술지에 반론을 게재할 수 있다.

- 가. 반론은 학술지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박을 의미한다.
- 나. 반론의 원고 분량은 원고지 50매 이내로 정한다.
- 다. 반론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제출 원고는 학술지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 가. 원고는 국문 및 영문초록,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나.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단, 각종의 표와 그림 및 일람, 색인, 부록, 영인 자료 등은 분량 계산에서 제외한다.
- 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 1 → 1) → (1) → ① 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라. 기타 원고 작성 요령은 APA 양식(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style)이 정한 문헌 작성 양식을 따른다.
7. 게재 신청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임의 탈락시킬 수 있다.
8. 논문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마감일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ppri.korea.ac.kr)를 통해 별도 공지된다.

### 제8조 (논문 게재신청자격)

1.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의 전공자 혹은 실무자에 한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의 대학원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나 위원회에 의해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임기 중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편집위원과 편집 간사는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논문 게재자는 게재료(일반논문 10만원 / 연구비지원논문 3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2.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발간 예정일)**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1조(예심)**

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가 접수되면 KCI 유사도 검사 및 학술지와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초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탈락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 저자에게 관련 내용을 별도 통보하도록 한다.

**제12조(초심)**

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1. 심사위원 위촉 -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순차적으로 심사위원이 위촉되어 심사가 진행되었을 때 2인의 심사자가 심사결과를 모두 ‘가’로 판정하면 나머지 1인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2. 심사의뢰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 초심 결과는 10일 이내에 회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可)’, ‘수정(修訂)’, ‘부(不)’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심사결과
가	가	가	계재 가능
가	가	수정	
가	가	부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심사결과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부	
가	부	부	게재 불가
수정	부	부	
부	부	부	

### 제13조 (수정 후 게재)

1.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2.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심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4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한다.
2. 다시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에서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수정 논문의 수준이 학술지 게재에 적당한지 심사한다.
3. ‘수정 후 재심’ 결과는 편집위원회 결과 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만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제15조 (수정 불이행)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게재신청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논문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제16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7조 (이의제기)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논문게재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응대한다.

## 제5장 기타 규정

### 제18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

### 제19조 (게재증명과 표절 처리)

논문게재증명은 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소 저술 윤리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20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술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JNKS 저술 윤리강령

### JNKS Ethical Standards for Scholarly Publication

2차 개정일 2020. 09. 01.

1차 개정일 2016. 12. 02.

제정일 2015. 03. 01.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분야의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전문학술지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약칭 JNKS, 이하 학술지)의 발간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이다.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는 북한학 및 북한학 인접 분야 연구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혹은 게재 신청하는 사람은 물론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들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 제1조 (표절의 기준)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3.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2조 (중복게재의 기준)

1.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2.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제3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지명하는 3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한다.

##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4조 (표절에 대한 제재)

1.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3.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공공정책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제5조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1.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3.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공공정책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 제6조 (기타)

본 학술지의 수록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반드시 원출처를 밝혀야 한다.

# JNKS 원고 작성 요강

## Publication Manual of JNK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의 원고는 기본적으로 APA 양식(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style)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을 따른다.

*The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i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PA styl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here not otherwise specified, it follows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

3차 개정일 2022. 12. 01.

2차 개정일 2020. 09. 01.

1차 개정일 2016. 12. 02.

제정일 2015. 03. 01.

### 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는 표지, 국문 및 영문초록(영문 저자 및 소속기관 포함), 본문, 참고문헌의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원고는 한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논문 작성 언어 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 이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지 하단에는 각주를 두어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을 표기하고,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 사사표기 등을 할 수 있다. 사사표기시 논문 제목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3. 논문의 제목은 한글의 경우 15자를 넘지 않도록 하고, 영문 및 기타 외국어의 경우 2줄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초록은 새 페이지에서 시작하며, 첫 줄 가운데에 Abstract라고 표기한다. 영문 초록은 150~200 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라고 표기한 후 영문 핵심 단어 3~5개를 나열한다. 단, 영어 외의 기타 외국어 논문일 경우 영문 초록을 1,500 단어 안팎으로 자세히 작성한다.
5. 전체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단, 각종의 표와 그림 및 일람, 색인, 부록, 영인 자료 등은 분량 계산에서 제외한다.
6.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본문 내 장, 절, 항 등 소제목은 최대 4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3단계 이내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 1) 본문 제목들의 번호는 상위제목부터 하위제목까지 I → 1. → 1) → (1) → ① 순으로 사용한다.
  - 2)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 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본문의 어느 곳에도 저자의 이름은 물론 저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8.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9.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는 경우는 저자명(국문은 전체 저자명, 영문은 성)을 쓰고 괄호한 후 그 속에 출판연도와 쪽 번호만 표시한다.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이 되풀이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단,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10.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11.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연도만 나열한다. 다만, 3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는 처음 인용 시에는 모두 제시하고 그 이후에는 첫째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한글 저자명은 “외” 영문 저자명은 “et al.”이라는 쓴다. 2명 이상의 국문저자명은 “, ”를 사용하여 나열하고 영문저자명은 마지막 이름 앞에 “&”를 붙인다.
12.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다만,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는 연도만 나열한다.
13. 표(줄간격 130%)와 그림은 < > 속에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예: <표 1>)과 그림 제목(예: <그림 1>)은 해당 표 또는 그림의 위에 위치시켜야 하며, 그 출처는 반드시 표나 그림 아래 밝히고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는 반드시 <>를 붙인다.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일반주(주: ), 개별주( a), b), c) ), 확률주(\*p<0.01, \*\*p<0.001), 출처순으로 배열한다.
14.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 제시하고,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기재한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동양어 문헌(일본어, 중국어 등),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한글·한자·일본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중국어

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 표기를 알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줄부터는 3칸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 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5.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한글문헌

- (1) 단행본 :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지: 출판사.
- (2)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 저자 (출판연도). 제목. <학회지명>, 권수, 쪽수.
- (3) 학위논문 : 저자 (제출연도). 제목. 학위 수여 대학 ○○학위논문 (미간행).

2) 영어문헌

- (1) 단행본 : 저자 (출판연도). 제목(이탤릭). 출판지: 출판사.
- (2) 저널에 게재된 논문 : 저자 (출판연도). 제목. 저널명(이탤릭), 권수, 쪽수.
- (3) 학위논문 : 저자 (제출연도). 제목(이탤릭). 학위 수여 대학 ○○학위논문.
- (4) 번역서나 번역논문은 한글 번역본에 한해 원서명을 함께 밝혀준다.

\* 학술지의 권, 호수를 알 수 없을 때는 저자/연도 다음에 월이나 계절을 표기.

- 3) 신문·잡지·기사는 저자명 (날짜). 기사명,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사명 (날짜).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
- 4)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만 쓰지 말고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두고,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접속일 필수 기재.
- 5) 시청각 자료(영화, TV프로그램, 음반, CD-ROM 등)는 예시를 따름.

Harrison, J. (Producer), & Schmiechen, R. (Director). (1992).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Evelyn Hooker* [Film]. (New York: Changing Our Minds). (영화일 때).

Crystal, L. (Executive Producer). (1993, October 11). *The MacNeil/Leher news hour*. New York and Washington, DC: Public Broadcasting Service.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때).